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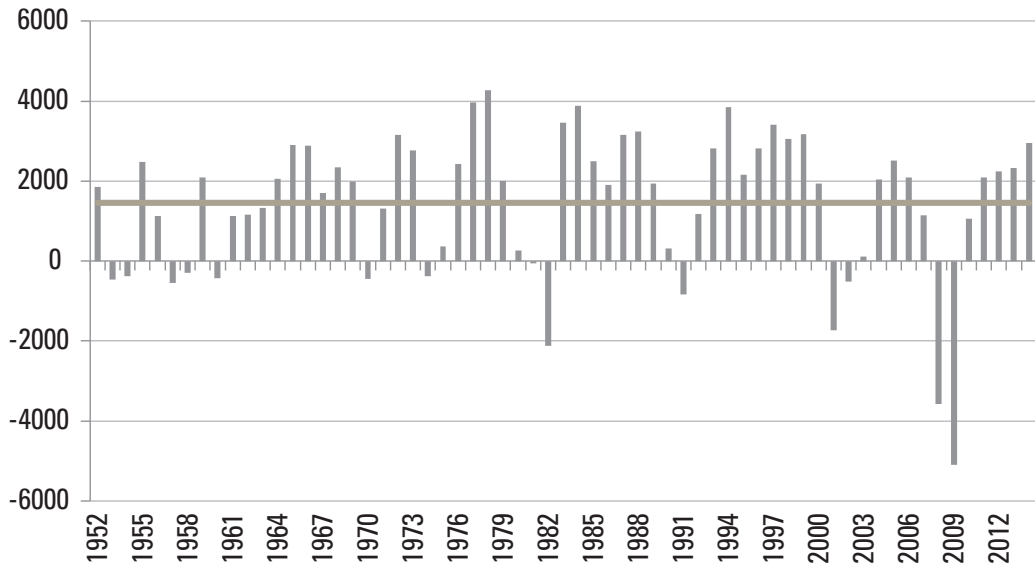
2015년 미국 고용 전망

Randall W. Eberts (미국 W.E. 업존 고용연구소장)

5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고용이 2008~20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 직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14년 5월, 비농 총 취업자 수는 2007년 12월 수준인 1억 3,85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말에는 여기에 200만 명이 추가되었다. 51개월 동안 연속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이 기간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월별 고용 연속 증가 최장기간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고용 동향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그 과정은 더디어서 많은 이들은 일자리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에 경기 회복 여력이 소진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1960~1961년 침체를 시작으로 과거 일곱 차례의 침체기간 중에서 이번이 고용 회복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데 소요된 기간은 과거 일곱 차례 침체에 비해 침체 이전 고용 수준을 회복하는 데 소요된 평균 기간의 세 배에 달했다. 평균 기간은 26개월인 데 비해 최근 회복기는 78개월이었다.

이와 같이 고용회복이 더딘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즉 장기간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와 침체기간 중 소멸된 일자리 수에서 비롯된다. 2007년 12월 침체가 시작된 이후로 22개월 연속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과거 일곱 차례의 침체기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랫동안 고용이 연속 감소한 기간이다. 2001년 침체기에 이보다 오래 고용이 연속 감소한 기간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감소폭이 훨씬 적어서 2008~2009년 침체기에 약 9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데 비해 감소한 일자리 수는 3분의 1 미만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최근 회복기의 평균 월별 고용 증가분은 이전 회복기의 월별 증가분과 거의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침체기보다 더 많은 일자리들이 회복된 셈이다. 고용 수준이 최저를 기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51개월의 기간 동안 평균 월별 고용 증가분은 17만 3,000명이다.

[그림 1] 연간 순고용 증가분



자료 :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과거 일곱 차례 회복기의 동기간 평균 월별 고용 증가분은 17만 1,000명이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연 단위로 보면, 29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이는 1950년대 이후 평균 증가분 150만 개(갈색 실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 지속적 성장 예상

이전의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일부에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실직 상태에서 구직 활동 중에 있는 700만 명의 구직자와 구직을 포기하고 구직활동을 중단한 그 외 근로자들을 위해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만큼의 여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전체 인구 대비 고용 비율(employment-to-population ratio)이 59%로 낮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미국 내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했음을 상기시켜준다.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노동력 참여율 감소와 전통적으로 낮은 생산성 증가율이 미국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

다고 경고한다.¹⁾

그러나 낙관의 여지는 있다. 2014년 5월 이후 고용이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월 고용 수준이 평균 264,000명 증가하였고 이는 과거 회복기를 통틀어 침체기 이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된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월별 증가분이다. 물론, 이러한 월별 증가 속도가 유지된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고, 과거 회복기의 경우에는 무려 90개월 이상 더 지속되었다. 침체기 이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된 지 7개월 동안 기록된 월별 고용 증가분 26만 4,000명은, 37만 2,000명을 기록한 1983년을 제외하면 어느 회복기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과거 임금 차례 침체기의 경우 현 단계에서 이후 지속된 기간이 평균 55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미국 경제가 향후 55개월간 지속적으로 확장된다면, 그리고 월평균 고용 증가분이 현재의 26만 4,000명을 유지한다면, 그 확장 종료 시점에는 1,4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향후 4년간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미미하게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은 10년 전 수준에 상당히 근접할 수 있게 된다.

노동시장 동향은 긍정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수요의 척도인 구인건수는 고용 증가 기간 내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도 최근 수개월간 더욱 빨라지고 있다. 현재, 2014년 월평균 구인건수는 2007년 평균을 상회한다. 지난 수년간 구인건수에 비해 적극적 구직자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에는 구인 1건당 실직자 수가 거의 7명에 달했다. 현재는 구인 1건당 2명 미만으로, 이는 침체기 이전보다 조금 높은 비율이다. 또한, 채용건수와 구인건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조사가 실시된 14년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즉 현재는 사용자가 원하는 자격 요건에 합당한 구직자를 찾은 데 반해, 과거에는 상당수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42명의 전문가 모두 2014년 4사분기의 GDP 성장률은 2.7%, 2015년 모든 분기는 이보다 조금 높은 (연평균) 수준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이전 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약간 낮은 편에 속한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은 2014년 1, 2사분기가 유난히 혹독했던 겨울 추위로 마이너스

1) Robert J. Gordon(2014), "A New Method of Estimating Potential Real GDP Growth: Implications for the Labor Market and the Debt/GDP Ratio," NBER Working Paper No. 20423.

성장을 기록한 이후에 3사분기 실질 GDP가 연간 기준으로 전분기대비 5% 성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성장세가 2015년에도 지속된다면, 2015년 전체 성장률은 전문가들이 내놓은 3.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세계 전망 자료에서 미국 경제가 2015년에 3.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유로존 지역에 대한 세계은행의 실질 GDP 예상 성장률은 1.1%로 저조하며, 영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성장을 보이지만 여전히 3.0%에는 이르지 못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해 약간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2015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3.6%로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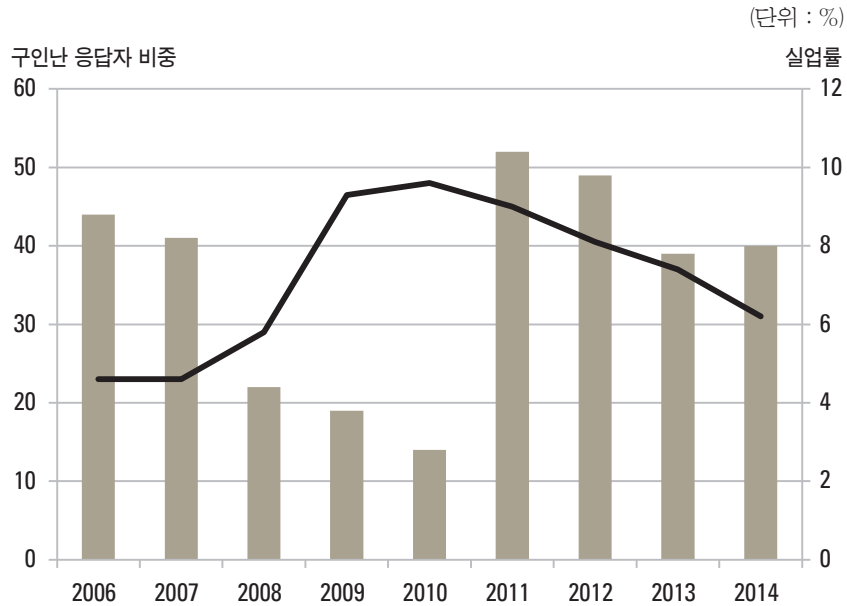
이러한 예상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저금리 유지 기조, 유가 하락, 전반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전망으로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면 2015년 중반경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성장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화 강세와 이로 인한 수출 위축 효과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입 가격이 낮아지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 또한 미국의 성장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전망에 따라 월별 고용은 21만 2,000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5.6% 안팎이 될 것이다. 더 낙관적인 세계은행과 IMF의 전망에 의하면, 순고용 증가 예상치는 그보다 높은 월 25만 명이며 실업률은 5.2~5.4%로 낮아진다.

■ 기술 미스매치로 인한 노동시장 문제점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용자들은 여전히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 맨파워 그룹의 인력부족 조사에 의하면, 적격 근로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2014년의 경우 약 40%로 상당히 높다. 침체의 주된 특징이 수요 부족임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이 경직된다면 기업들의 구인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림 2]는 2008년부터 2010년의 상황이 그러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적격 근로자 구인에 어려움을 토로한 응답자는 2010년 약 15%로 급감했다. 그러다가 2011년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다.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이 급증하여 50%를 넘어섰고, 그와 동시에 1,370만 명

[그림 2] 적격 근로자 구인난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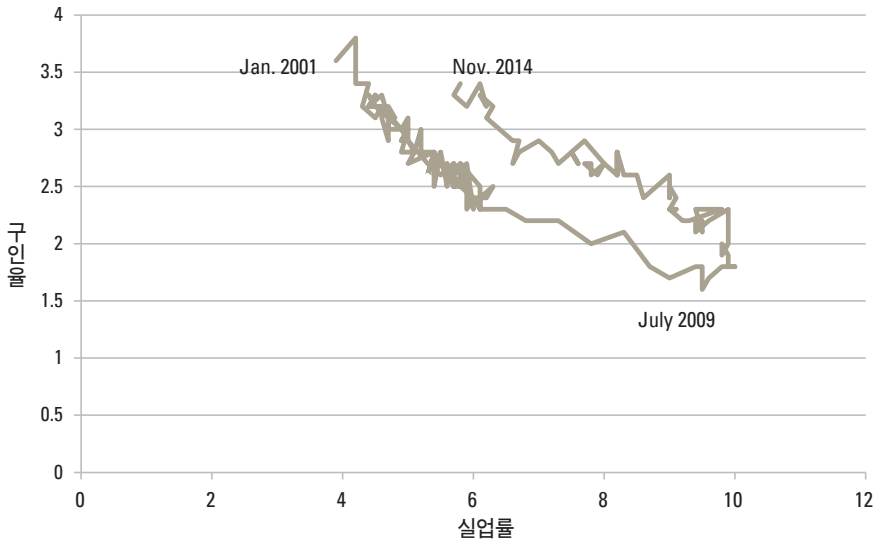
자료 : 맨파워 그룹, 인력부족 조사(Manpower Group's Talent Shortage Survey).

이 여전히 구직 중에 있었다. 이후로 기업들의 구인난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응답 비중은 40%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이 훨씬 더 경직되었던 2007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여기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고 그중 상당수가 임금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이었는 데 적격 근로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최근 경제침체가 경기변동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에 맡겨 두더라도, 최근 IMF 조사에서는 미국 경제 내 기술 미스매치로 인해 실업률이 그러한 구조적 장애물의 초기 단계보다 1.75%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추산하였다.²⁾ 구인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을 보면(그림 3),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실업률이 동일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구인율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약 3%였던 이전의 경기순환기에는, 실업률이 4%를 조금 웃돌았다. 하지만 현재는 구인율이 3%로 동일함에도 실업률은 약 5.6%로서 1.5~1.75%포인트 정도 더 높다.

2) Marcello Estevão and Evidiki Tsounta(2011), “Has the Great Recession Raised U.S. Structural Unemployment?” IMF Working Paper wp/11/105.

[그림 3] 2001~2014년의 실업률과 구인율의 관계



자료 : 미국 노동통계국.

■ 임금 증가 둔화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 수도 지난 몇 년과는 다르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소득, 특히 중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종의 실질소득은 부진한 상태다. 전체 근로자의 실질 주당 소득은 2008년 초반 이후 단지 3.5%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주당 평균 실제 근로시간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확장기 동안 늘어난 소득 증가분이 최상위 소득 계층에게만 돌아갔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국정연설에서 중간 및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연방 최저임금 인상 등의 조치를 촉구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을 현재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고, 연방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대통령령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였다. 2013년 말에는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향후에는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 시 의회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폭이 생계비 지수와 연동되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의회는 2014년에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2015년에도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2014년 11월에 개최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를 확보하였고 하원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유지하였다. 이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상원 과반수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하 양원에서 거대한 반대 세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주에서 연방 최저임금과는 다른 주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2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다. 4개 주에서는 2014년에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승인하였고,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법안 승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승인하였으며, 9개 주에서는 자체 최저임금 관련법의 생계비 조정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격차 해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초, 2년제 커뮤니티 대학(community college)에서 출석률이 절반 이상이고 평균 학점 C+를 유지하며 2년제 학위 이수 또는 4년제 대학 편입 예정인 자는 누구라도 무료로 커뮤니티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의하면, 커뮤니티 대학 등록금과 수업료는 연방 정부와 해당 주 정부가 협력 체제를 통해 충당한다. 연방 정부가 비용의 75%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10년간 약 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주 정부가 지급한다. 등록금과 수업료 납부에 따르는 재정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이후 생애 전반의 소득도 늘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 가계와 고소득 가계 사이에 대학 입학 및 학위 취득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저소득층의 경우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집단에 비해 1980년경 출생 집단의 대학 이수율은 단지 4%포인트 증가했지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해당 집단 간 이수율이 18%포인트 증가했다.³⁾ 또한, 이 연구의 저자들은 소득에 따른 대학 입학 격차의 거의 절반은 고등학교 졸업 비중과 출신 고등학교의 질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대학 입학에 대한 금전적 장벽만이 유일한 장애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무상 대학 교육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고등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Martha J. Bailey and Susan M. Dynarski(2011), "Gains and Gaps: Changing Inequality in U.S. College Entry and Completion," NBER Working Paper No. 17633.

최근 미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 CBO)의 한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79년과 2007년 사이에 상위 20%의 소득은 65% 증가한 반면에 하위 20%의 소득은 겨우 18%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 증가의 격차는 상위 1%와 기타 상황을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가계소득 상위 1%의 소득은 275% 증가하였다. CBO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의하면, 5분위 계층은 세전 소득의 절반 조금 넘게 받은 반면에 1분위 계층은 세전 소득의 약 5%를 받았다.⁴⁾ 의회가 커뮤니티 대학 무상 교육을 위한 기금을 예산에 편성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 연방 인력프로그램의 재승인에 대한 초당적 지지

이처럼 압울할 정도로 불통인 의회에서 국가인력개발프로그램이 재승인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2014년 7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인력 법안을 “인력 혁신 및 기회 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 WIOA)”으로 제정하였다. 초당적, 즉 상하 양원의 지지를 얻은 이 법의 통과로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 WIA)”의 재승인 또는 대체를 둘러싼 의회 내 난국은 종결되었다. WIA는 1998년에 제정되어 2003년 9월 법령의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운용되었다. 그 이후, 행정부가 매번 새로운 의회와 WIA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자 애쓰는 동안 WIA는 한시적 유지 장치를 통해 효력이 연장되어 왔다. 마침내, 10년 넘게 논의를 벌인 끝에 WIOA는 미국의 공공인력개발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었다. WIOA는 분권화, 유연성, 지역 중심의 제도를 허용하는 WIA의 주요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조 체제를 육성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지역의 “인력투자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의 역할을 강조하며, 결과 중심의 성과척도 및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장애인과 단절된 청년들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 제도 내 통합을 위한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WIOA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11),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and Federal Taxes.

- 성인, 실직자, 청년 프로그램, 성인교육 및 문맹퇴치 프로그램, ‘와그너 페이셔 고용 서비스 (Wagner-Peyser Employment Service)’ 등의 핵심 프로그램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직자 지원을 위한 연방 투자기금이 편성되도록 한다.
- 인력프로그램을 상호 조정·편성하는 데 있어 지역인력투자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 개발에 있어 지역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 필요한 기술에 대한 훈련이 제공되고 사용자와 유자격 근로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이 다양한 인력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주, 지역, 소지역 인력투자 선결 과제를 수립하는 기관의 구성원을 정비하고 집행기구의 사업적 지도력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러한 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 주 정부에 자체 경제 지역을 파악하고 이러한 지역 내 기획과 서비스 제공 관련 상호 조율 권한을 지역인력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 내 공조 체제를 활성화한다.
- 경력 경로 및 업종 내 제휴를 활성화하여 수요 업종 및 직종이 확대되게 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인력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 구직자, 사용자, 일반인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성을 확대한다.
- 원스톱 서비스 센터의 ‘와그너-페이셔 고용서비스’와 ‘취약계층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들이 성인, 실직자, 청년 프로그램과 같은 기타 의무 프로그램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⁵⁾

법안에서, 의회는 지역인력위원회가 사용자,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해 인력개발제도의 가용성과 실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술사용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더욱 지능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고객과 지역 노동시장 조건의 특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 및 지역의 성과 척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주는 비교집단을 포함하는 엄격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체 인력프로그램을 평가하여야 한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5년여 동안 회귀조정(regression-adjusted) 성과 측정기준을 도입하였고, 워싱턴

5) USDOL/ETA(2014), “Highlights of WIOA Reforms to the Public Workforce System.”

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엄격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체 인력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WIOA가 발효되면 모든 성과 척도는 회귀조정되며 모든 주는 연 단위로 자체 프로그램을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WIOA는 제정된 날로부터 만 1년이 되는 2015년 7월 1일에 효력이 개시된다. 단, 주별 통합 계획과 공동 성과 책임 등의 일부 조항은 이듬해부터 실행이 의무화된다.

■ 균형 회복

경제성장 전망이 개선되면서, 초당적인 미 의회예산처(CBO)는 2015년 연방 예산 적자가 2014년의 5,060억 달러, 2013년의 6,800억 달러보다 낮은 4,69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예상대로라면 예산 적자는 GDP 대비 2.6%가 되며, 여러 해 중에서 가장 낮은 뿐 아니라 40년 평균치인 3.1%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2014년의 경우, 연방 세입이 8% 증가하고 지출은 2%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 적자 폭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방 세입과 연방 지출 모두 GDP 대비 백분율 기준으로 볼 때, 장기적 동향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 1974년과 2013년 사이에 연방 세입은 GDP 대비 평균 20.5%였으며 연방 지출은 평균 17.4%였다. 그러나 아직 예산이 적자 상태에 있고 향후 수년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방 부채는 2013년 GDP 대비 72%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5년에는 74%, 2024년에는 77%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지출이 2%로 느리게 증가하면서, 연방 고용은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아직까지 침체기 이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연방 취업자 수는 침체기 이전보다 37,000명, 즉 1.3%가 적으며, 반면에 민간부문의 취업자 수는 2007년 12월 수준을 1.4% 상회하였다. 주 및 지방 정부의 경우는 훨씬 더 부진하다. 2007년 12월 주 및 지방 정부 일자리는 1,960만 개에 달했지만, 2014년 말 현재는 그보다 43만 1,000개, 즉 2%가 적다. 정부 고용은 민간부문 취업자 수 7명 중 1명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 수에 크게 기여한다. 정부 내 일자리가 침체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민간부문이 그 차이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자리가 회복되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실업률은 0.3%포인트 낮아질 것이다.

■ 장기 실직자

근로자의 입장에서 2008~2009년의 대침체가 남긴 가장 참혹한 잔재 중 하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직자 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는 실직자의 45%가 26주 넘게 실직 상태에 있었다. 이 수치는 거의 2년 동안 지속되다가 매우 천천히 정상 수치를 향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도 전체 실직자 중 장기 실직자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31%이며, 이는 침체가 직전 수준의 거의 두 배에 이르고 그 다음으로 심각했던 과거 침체기인 1983년의 최고치 26%보다도 훨씬 높다. 결과적으로, 현재 장기 실직자 수는 가장 많았던 시기의 690만 명보다는 적은 270만 명이지만 현재 활발한 경제 동향을 감안하면 너무나 많다.

장기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연장 실업수당(Extended Unemployment Compensation : EUC)’ 프로그램을 2013년 12월에 종료되도록 내버려 두고 26개월 이후에 대해 급여를 연장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여러 주에서는 정기급여 수혜 기간을 단축하였고 그 기간을 14주로 단축한 주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여전히 장기 실직자로 남아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호는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국정연설에서 장기 실직자의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Ready to Work Partnership’이라고 불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세 가지 목표를 지닌다. ① 구직자, 주 정부 및 지역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개인화된 정보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② 사용자들에게 지역의 인력기관 및 훈련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촉구하며, ③ 관련 기관들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유용한 훈련 전략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러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훈련 참가자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구상안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이유로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구하거나 주어진 일자리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숙련된 경력 근로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 실직자의 개별 수요와 기능을 종합적, 선행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내용에는 집중 코칭과 기타 단기 지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기술은 갖추고 있지만 주어진 일자리의 소재 파악이나 면담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취업 알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 다른 종류의 지원으로는, 중기술 및 고기

술 일자리에 이르는 경력 경로에 맞추어 속성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은 현재의 근로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재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개인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실무 경험, 유급 인턴십, 등록 수습제를 결합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와 기타 관계자들이 H-1B⁶⁾ 업종들에 대한 고용 기회와 실무 훈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장벽, 소득 지원, 장기 실직자에게만 제공되며 취업 후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도 다루고 있다.

2014년 10월, 미국 노동부는 20개 주의 23개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1억 7,000만 달러를 ‘Ready to Work Partnership’의 교부금으로 지원하였다. 이 교부금을 받은 기관 중 하나는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인력투자위원회(WIB)로, 장기 실직자 훈련 투자금으로 840만 달러를 받았다. 인디애나폴리스 WIB는 지역 사용자들이 외국인으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H-1B 비자에 의존하는 일이 줄도록 훈련 참가자들에게 기술 및 보건의료 분야의 STEM 관련 기능을 갖추게 한다는 계획이다.⁷⁾ 이 지역 WIB의 대표에 의하면, “이 지역 프로그램은 노동력에 재편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집단을 목표로 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3년 동안 800명에게 평가, 훈련, 취업 알선 서비스를 결합하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 노동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또 다른 프로그램은, 위의 사례와는 달리 노동시장의 협소한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의 지역인력투자위원회인 Capital Workforce Partners는 지역 보건의료 부문의 간호 및 정보기술직 300명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67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⁸⁾ 이 지원금은 장기 실직자(85%)와 현직 근로자(15%)에게 나누어 사용된다. 구직자의 기술과 지역 사용자의 수요 매칭에 도움이 되도록 장기 실직자에게 맞춤형 평가를 도구 사용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집중적인 취업 사전 서비스와 실무 훈련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인디애나폴리스 프로그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혜자들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6) 미국 기업들이 기술적이나 이론적으로 전문 지식을 요하는 공학, 과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

7) EmployIndy Press Release, 10/15/14, “EmployIndy awarded \$8.4 million to reduced Local Use for H-1B Visas by training long-term unemployed.”

8) Capital Workforce Partners, 11/10/14, “‘REACH’ing the Workforce Needs of Connecticut’s Healthcare Institutions.”

지원이 제공된다. 즉 재취업 알선, 즉각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단기 속성 훈련, 경력 경로에 이르는 장기 훈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보건의료 부문의 사용자 6개소가 참여하며 대부분은 병원이나 보건의료 제도 기관이다. 보건의료는 이 지역에서 대침체 이후로 실질적인 고용 증가를 보인 유일한 부문이다.

미 행정부의 Ready to Work 구상안에는 커뮤니티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2014년 9월, 미국의 부통령은 400곳의 기업과 산학 연계를 맺은 270개 커뮤니티 대학에 4,500만 달러의 교부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교부금은 '무역조정지원 커뮤니티 대학 및 직업훈련(Trade Adjustment Assistance Community College and Career Training : TAACCCT)' 경쟁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재정이 총당되며, 이 프로그램은 훈련에 기업의 요구사항을 더욱 잘 반영되도록 하며 구직자들에게 경력 사다리 상승을 통해 노동수요가 높은 부문의 고임금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턴십, 수습제, 직업 관련 기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티 대학과 기업이 실시하는 제휴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남동부에 위치한 델가도(Delgado) 커뮤니티 대학은 엑슨모빌(ExxonMobil), 록히드 마틴(Lockhead Martin), 필립스66(Phillips66) 등의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기 위해 TAACCCT 프로그램으로부터 250만 달러를 지원받았는데, 이 협력 사업은 대학이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이 기업들과 기타 기업들의 기술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고등학교 교육 미이수자와 같이 대학 수준의 수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제조업과 에너지 부문의 사업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학문적 읽기, 쓰기 및 수학 능력을 가르친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프로그램 설계, 실행 및 지속적 개선에 기여하며, 고용 기회 및 업무 기반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장비, 시설 및 감사 등과 같은 자원도 제공한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향후 3년 동안 1,150명의 학생에게 용접, 기계 가공, 전기 및 공업 유지 보수 직종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⁹⁾

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09/29/fact-sheet-vice-president-biden>(accessed January 22, 2015).

■ 요약

침체기 동안 소멸된 일자리가 회복되고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은 이제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월별 순고용 증가는 이전 확장기보다 더 빠르지는 않지만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에 GDP 성장률은 최소 3%를 기록하며 이에 따라 월평균 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고용 현황이 지난 몇 년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다. 장기 실직자의 수가 여전히 많고, 임금 증가율은 부진하며, 기술 미스매치의 조짐이 현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행정부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하고 더 높은 임금의 고용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여 왔다. **KLI**